

판사들, 장애인과 동행...시외 이동권 현장 점검

광주지법 판사들 종합버스터미널 방문한 이유는

“휠체어 리프트·저상버스 한 대도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송 장애인들과 함께 구석구석 둘러봐...부장판사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일까.

2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북구 광주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나경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비가 장착된 대형버스를 구석구석 살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가 법정에서 나온 이유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갖춘 대형버스를 보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장애인 리프트 설비를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비장애인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지, 장애인 이동시설을 장착한 버스가 실제 고속버스 회사에 배치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재판부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 실무관과 소송을 제기한 휠체어 장애인 2명이 참석해 리프트를 실제 이용하기도 했다. 소송 피고인 금호고속 관계자도 현장을 지켜봤다.

실제 장애인 2명이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 설비를 이용해 탑승했다. 1명의 장애인이 탑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버스기사가 장애인 휠체어 고정용 안전고리를 걸

자 재판부는 질문을 쏟아냈다.

나경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은 “리프트 설비로 인해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설비가 고장이 난 적이 있는지요”, “소음은 큰가요, 비장애인은 원은 없었나요”, “리프트 설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탑승 가능 인원은 몇명입니까” 등을 물었다.

버스기사는 “(이 버스는) 전동휠체어를 4대까지 실을 수 있고 하루 평균 13명의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한다”면서 “운행 10년간 고장이나 사고가 난적이 적었고 버스 뒷면에 장애인 전용 차량 LED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 장애인 탑승시 운전자들의 민원도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휠체어 리프트 설비 발판의 길이를 직접 줄자로 측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30여 분만에 현장점검을 마치고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로 이동해 장애인 리프트 설비가 없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살폈다.

장애인이 터미널 입구에서부터 플랫폼 승하차 지역까지 접근가능한지, 승차권 구입과 장애인을 위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열린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도입을 위한 현장점검에서 장애인 활동가와 금호고속 관계자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했다.

비어있는 플랫폼에서 재판부는 리프트를 이용해 탑승할 경우를 가정하고 승하차 여유공간을 확인

했다.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법률대리인들은 “버스 두 대를 주차할 공간에 한 대만 세우면 장애인 리프트

를 갖춘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부정하는 금호고속측과 이들이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서둘러 양측을 중재하고 매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애인들은 “휠체어 이용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매표소와 키오스크 등 차별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측은 “바로 옆에 장애인·노인 전용 매표소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들은 “광고 배너 등으로 가려놓은 탓에 쉽게 입구를 찾지 못한다”고 곧바로 반박하는 등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나 부장판사는 “오늘 현장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면서 “할 말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서 하면 된다”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장애인 측 법률대리인 이소아 변호사는 “오늘 현장점검 결과 리프트 버스를 위한 플랫폼이 없어 버스가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는 금호고속의 항변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승하차를 위해 차량 한 대 자리를 비우고 경사로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장애인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해 달라는 소송은 지난 2017년 제기됐지만, 지난 2018년 5월 한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지난 3월 다시 재개됐다.

‘사건 브로커’ 관련 전 경무관 구속기소

광주지검, 현직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속도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무마 청탁 혐의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잇따라 진행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사건브로커와 관련된 인사청탁과 지자체 관급공사 수급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경무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위해제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C경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D(62)씨에게 올해 4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정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B경감은 지난해 하반기 A 전 경무관의 청탁을 받고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일부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가 브로커 D씨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넘기자 D씨가 A 전 경무관을 통해 B경감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C경정은 광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2021년 브로커 D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사건 일부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C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감과 C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이상의 합평군수 부인 ‘돈봉투 사건’ 재수사

경찰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했지만 검찰이 재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이상의 합평군수 부인 뇌물 수수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군수 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1년 5월 합평생태공원 조성 관련 업체로부터 3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A씨와 이 군수 비서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전담자 부부와 건설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지했다.

경찰은 당시 “받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수 비서실장과 함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지검 목표지정은 올초 이 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에 대한 재수사와 전담자 부부, 건설

업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 혐의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인 A씨 뿐 아니라 이 군수도 양복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3년째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군수를 두차례에 걸쳐 송지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중이다.

합평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빠지기 수사다. 사건 브로커와 연관돼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6·25 때 신안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희생자·유족들 소송 잇따를 듯

한국전쟁 당시 신안 병풍리에서 경찰에 의해 좌익 활동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승소여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신안 병풍리 장비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주민들에게 좌익활동 혐의를 씌워 목숨을 빼앗은 비극이다.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에서 농사를 짓던 A씨는

1950년 10월 31일 ‘조사할 것이 있다’는 증도지서 경찰을 따라갔다. 집 근처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 7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정부는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화위 결정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은 진화위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송을 냈다”면서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